

# 인천항만공, 중동 리스크 대응 총력 물류비 지원·대체시장 발굴 나서

인천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업체당 100만원 한도 보조  
중동·북아프리카 수출 대상  
중고차 동유럽 판로 모색  
물동량 감소에 시장 다변화

인천항만공사가 중동 사태의 장기화에 맞서 관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물류비 지원에 나선다. 또 걸프국으로 향하는 선적이 사실상 중단된 중고차 업체를 위해 수출 대상지의 다각화를 시도한다.

공사는 지난달 29일부터 '중동사태 대응 긴급 물류비 지원사업'의 시행에 들어갔다. 이달 9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는 "중동정세 불안 및 국제물류 차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 여파로 국제 해상운임이 크게 뛰었다. 최근 인천지역 수출기업 대상 피해에 대해 조사 결과, 해상운송비 상승과 선적 지연, 추가보관료 발생 등에 따른 물류비 긴급자금 지원 요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대상은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에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인천지역 중소기업이다. 업체당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국제 운송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이를 통해 최근 급격히 증가한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수출기업의 수출경쟁력 유지와 안정적인 해외 판로 확보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이 지원사업을 통해 중동지역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긴급 애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공사는 기대하고 있다. 주요 분야는 중고자동차와 화장품, 산업재, 소비재 등이다.

공사 관계자는 "기업 피해에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유관



지난달 인천 연수구에서 개최된 '중고차 수출역량 강화' 세미나. /인천항만공사

기관과 협력해 긴급금융, 물류, 판로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중순에는 인천 송도동에서 '인천항 중고자동차 수출 대체시장 발굴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내 중고차 수출기업의 판로 다변화와 인천항 중고자동차 물동량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동 뱃길 운임이 급등하면서 중고차 수출기업은 주력시장인 서아시아행 선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천항의 올해 1분기 중고차 수출 물동량은 전년동기에 비해 31%나 줄었다.

이번 세미나에는 지역 내 기업 약 50곳이 참석해 대체시장 내 추이 등의 정보를 공유했다.

세미나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중고차 시장 분석 전문가인 그린자동차평가센터 대표이사사가 나섰다. 신 대표는 "중동 수출 위기 극복을 위한 대체시장 동향"을 주제로 동유럽,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유망시장의 최근 물동량 흐름과 수요 특성, 가격대, 유망 차종 동향 등을 소개했다.

중고차 유망시장 중 동유럽 수출은 202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1분기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1% 증가하는 등 큰 성장세를 보여, 대체

시장으로서의 가능성이 보인다고 전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동유럽 시장 진출 경험이 풍부한 헤이먼의 조태신 대표이사 사가 떠오르는 동유럽 중고자동차 시장 진출전략을 주제로 국내 기업의 동유럽 진출 노하우를 공유했다. 그는 "국내 중고자동차가 동유럽 시장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전했다.

김상기 인천항만공사 운영부사장은 "중고자동차 수출기업들이 새로운 시장 정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대체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번 세미나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수출시장 다변화를 적극 지원해 인천항 중고자동차 수출 물동량 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인천항만공사 ESG경영실, KOTRA 인천지원본부, 인천상공회의소,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2026년 중고자동차·부품 수출 상담회 지원사업'과 연계해 진행했다. 특히 수출상담회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시장정보 제공부터 바이어 상담, 후속 계약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구성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metro

# 수산자원공단, 바다숲 탄소거래 대통령표창

해양생태계 복원·탄소중립 기여

한국수산자원공단의 '기후블루카본실'이 해양생태계 회복 및 탄소중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공단 소속 기후블루카본실은 해양수산부와 함께 '바다숲 탄소거래사업'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수산 기반의 탄소중립 기여와 해양생태계 회복 가치를 제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등 혁신적인 해양 탄소중립 모델을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통령표창은 지난달 열린 제14회 바다식목일 기념식에서 수여됐다.

공단은 또 갯녹음 현상(백화현상)으로 사라져가는 바다를 살리기 위해 바다숲 조성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해양생태계 복원은 물론, 생물다양성 회복에도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 해양수산분야 핵심 자원인 바다숲의 탄소 흡수량을 검증하고, 이를 기업의 탄소중립 실천과 연



한국수산자원공단 소속 '기후블루카본실'이 대통령표창을 수상하고 있다.

결하는 바다숲 탄소거래 시스템구축 사업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의 김종덕 이사장은 "이번 수상은 기후 위기 시대를 대비하여 바다숲이 가진 생태적·경제적 가치를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바다숲 조성·관리 전문성과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국제적인 블루카본 선도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공단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바다숲 탄소 흡수량 검증 체계를 더욱 정교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해 해양수산 분야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 정부, 여름철 농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농식품부, 곡류·채소류 집중검사  
해수부, 수산물 위생점검 실시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하절기 농수산물 특별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주요 대상은 기온·습도 상승으로 부패나 변질 우려가 있는 농수산물을 비롯해 2023~2025년 기간 생산·유통 단계에서 부적합 발생 빈도가 컸던 품목 등이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농식품 1500여건을 대상으로 곰팡이독소의 유무를 검사할 계획이다.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곰팡이가 슬 수 있는 옥수수·대두·율무 등의 곡류와 콩류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또 병해충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고추, 복숭아 등 채소, 과일 1500여건에 대해 잔류 농약을 검사한다. 아울러 상추처럼 생식하는 채소 740건에 대해 유통

이전에 식중독균이 있는지 조사한다.

수산물의 경우 식약처가 넙치, 조피볼락 등 횡감으로 쓰이는 수산물 1000여건을 대상으로 비브리오팀, 동물용 의약품 등을 검사할 예정이다.

관광객이 몰리는 주요 해수욕장·항구 등지에는 식중독 신속 검사 차량을 배치한다. 횡집과 수산물 시장 등지의 수족관 물을 수거해 현장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수산물을 취급하는 판매업체를 대상으로는 위생관리 등을 지도한다. 해수부는 양식 수산물에 대한 동물용 의약품 검사, 위판장 수산물에 대한 비브리오팀 오염 실태 조사, 현장 위생관리 지도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거래를 통해 유통되는 농수산물 안전관리에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위생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 집단민원 70건 해결... 국민콜 110 통합 확대

공정위, 3만명 불편 집단갈등 조정  
SI 국민신문고 시범서비스 도입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 집단갈등민원 70건을 해결하고 분산된 정부 상담번호를 '국민콜 110'으로 통합하는 등 국민 권익구제와 행정 혁신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1일 밝혔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9대 핵심 성과를 발표했다.

우선 권익위는 지난 1년간 선제적·현장 중심 대응을 통해 총 3만 498명의 어려움을 유발했던 집단민원 70건을 조정 해결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지방정부청사 앞 장기 농성자 9명이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일상으로 복귀했고, 관성적인 반복 민원은 약 15만 건 감축됐다.

지난 1월에는 전담조직인 '집단갈등조정국'을 신설해 법정부처 갈등 해결 기반

을 다진데 이어, 이달 중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단갈등·특이민원 해결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자체와 협력한 현장 중심 서비스도 확대했다. 지난해 7월에는 국정기획위원회와 함께 전국을 순회하는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을 운영해 총 850건의 국민제안과 민원을 접수했다. 이를 통해 양구군 철도건설로 인한 통행 불편 민원 등을 관계기관 협의로 해결하는 성과를 냈다.

국민 불편이 컸던 공공기관 상담번호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약 700개에 달하던 공공기관 상담번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난 5월 26일부터 국토교통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15개 중앙행정기관의 대표번호를 '국민콜 110'으로 추가 통합했다. 권익위는 이를 2027년까지 34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민원 처리 혁신도 본격화됐다. 지난 2월 국토부, 식약

처, 인천시, 시흥시 등 4개 기관에 'AI 기반 국민신문고 시범서비스'를 도입해 민원 답변 추천과 민원 일괄처리 기능을 가동했다.

이 외에도 싱크홀 사고 피해 배상을 위해 지방정부가 가입하는 영조물 배상보험 내 '지반침하' 항목 신설을 권고하는 등 생활 밀착형 제도 개선과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윈스톱 신청 및 재결서 음성 지원 서비스도 도입했다.

반부패 및 청렴 문화 확산 성과도 두드러졌다. 최근 1년간 부패·공익침해 신고 사건 처리 건수는 1만 864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7% 늘었고, 보호사건 처리 건수 역시 1195건으로 154.3% 증가했다. 특히 지난 12월에는 도시 재개발 사업 중 국·공유지 위법 무상 양도 사건을 신고한 국민에게 역대 최고 금액인 20억원(기존 최고액 12.2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공정위, 트립닷컴 환불 방해에 제재

통신판매업 미신고 항공권 판매

온라인 여행 플랫폼 트립닷컴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항공권 취소대금을 결제 수단이 아닌 항공사 바우처로 환급하는 등 청약철회를 방해하다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트립닷컴 트래블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이하 '트립닷컴 싱가포르') 및 주식회사 트립닷컴코리아(이하 '트립닷컴 코리아')가 트립닷컴 플랫폼을 통해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 청약철회 시 대금을 소비자가 결제한 수단과 다른 수단으로 환급하는 행위 등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트립닷컴 싱가포르는 2017년 11월 20일부터 2025년 9월 23일까지 국내 소비자에게 항공권 판매 정

보를 제공하고 청약의 접수하면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았고, 트립닷컴 코리아 역시 2020년 4월 17일부터 2025년 1월 20일까지 통신판매업 신고 없이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들 업체는 아울러 2020년 2월 5일부터 2025년 7월 30일까지 소비자들이 항공권 구매를 철회한 일부 거래 건에 대해 소비자들이 결제한 수단으로 대금을 환급하지 않고 항공사의 바우처로 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트립닷컴 측은 항공권 취소 화면에 '항공사 규정에 의거하여 경우에 따라 환불금액이 항공사 바우처로만 제공될 수 있다'는 등 환불금액이 항공사의 바우처 형태로만 제공될 수 있다는 취지로 고지하며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시 대금은 소비자가 결제한 수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환급되어야 한다.

/세종=한용수 기자